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전국 순회 간담회' 실시

8 편집국 | © 승인 2013.11.13 11:01

쟁점별 방침 의견 수렴 ...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서 최종 확정



내년 12월 임원 직선제 실시를 위한 산별연맹 첫 간담회가 12일 오후 건설산업연맹회의실에서 열렸다. 양성윤 수석부위원장이 직선제 주요 쟁점별 기본방침(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임원직선위원회

민주노총이 내년 12월 임원 직선제 실시를 위한 산별연맹·지역본부 순회간담회를 시작했다.

11월 13일 현재 순회 간담회 일정이 확정된 곳은 △ 12일 오후 2시 건설산업연맹 △ 14일 오후 1시 경기지역본부 △ 18일 낮 12시 언론노조 △ 18일 오후 5시 공공운수노조연맹 △ 20일 오전 10시 서울지역본부 △ 20일 오후 2시 화학섬유연맹 등이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위원회는 산별연맹·지역본부 임원들로 구성됐다. 12일 오후 2시 서울 대림동 건설산업연맹 회의실에서 첫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원직선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중앙집행위원회를 통과한 '직선제 주요 쟁점별 기본방침(안)'을 설명하고 연맹 중앙집행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노총은 이달까지 산별연맹과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순회간담회를 실시한 뒤 다음 달 중순께 2차 기본방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 방침과 규약·규정개정안, 직선제 실시 로드맵을 의결한다.

민주노총이 1차적으로 마련한 기본방침에는 △선거구·개표구·투표구 설정 및 투표소 설치 기준 △선거권 부여 기준 △선거인명부 작성 방법 △투표·개표 방법 △선거관리위원회 선출 방법 등 직선제 실시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제시돼 있다.

민주노총은 현장투표와 우편투표만 허용하고 ARS·모바일·인터넷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1차 기본방침에서 확정하지 못한 부재자 우편투표 상한선 범위, 선거운동 보장과 제한 기준,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경우 당선자 확정 방법은 2차 기본방침에 담을 예정이다.

민주노총 임원직선위원회는 임원선거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절차는 규약과 규정에 나와 있지만, 조합원 직선제로 두 번 이상 투표를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집국 kctuedit@nodong.org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